

# 국민의힘 “반도체 R&D 특례·지방 미분양 DSR 완화 촉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반도체 특별법 당정협의회

주52시간제로 반도체 경쟁력 약화  
각국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도입

##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 지원  
세제지원 확대, 물가안정 등 도모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의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제안안 편성 요구,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

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경제부처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비수도권에서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정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곽종근 “국회 본관서 빼낼 요원 없었다”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

“尹,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지시 당시 시점서 요원들 본관에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진술에 여당은 곽 전 사령관이 야당에 회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반박한 야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라는 국회 측 장승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주장과 정반대의 진술을 한 셈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국회 본관 안에 다른 타깃(대상)은 없었다는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 답했다.

아울러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피고인이 현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의원’과 ‘요원’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요원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있었던 (통화에서) 707 특임단 인원을 밖으로 빼내라고 한 게 맞다”며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35분 사이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도 맞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태 직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양심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김병주 의원이 군사령관일 때 곽 전 사령관은 중요

참모였다. 그 관계를 군인들은 다 안다”며 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뒤 민주당 의원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그 자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야당이 즉각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어디다 대고 회유를 했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짜가지(없다)”고 말하자 부 의원은 “짜가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겁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말하는데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저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판단해서 말한 것”이라며 “제 의지대로 말한 것”이라며 여당의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전북 군산 소재 접점 운영자 무속인 ‘비단아씨’ 이선진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차례 자신의 점집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기 직전에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장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 전 장관)과 내가 뭔가를 했을 경우, 그게 잘 되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최 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임시국회서 ‘에너지 3법’ 등 결론 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2월 중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며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의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 “민생·경제 살리기 신속논의 기대”

>> 1면 ‘여야정 4자 참여...’서 계속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

하다”며 “지난해 AI 기반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의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홍 기자